더 밝은 미래를 함께 여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062-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8059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5월 14일 (음력 4월 10일) 수요일

수완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367-3000

공기업 '先 민영화·後 지방 이전' 확정

나주 혁신도시 축소 현실로

17개 중 3~5개 입주 무산·한전도 인력 감축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을 먼저 확정하고 지방 이전 계획을 나중에 보완하는 '선(先) 민영화, 후(後) 지방 이전' 정책을 확정함에 따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17개 가운데 3~5개는 입주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한전 본사는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10~15%의 인력 감축이 예상되는데다 일부 공기업은 통폐합 대상에 포함,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규모 축소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50~60개를 민영화 및 통폐합을 통해 250개 정도로 줄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로 예정된 최종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및 외부전문가 그룹과의 논의를 진행중이다.

정부가 최종 검토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 방안에는 당초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17개 공공기관 가운데 4~5개 정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혁신도시의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한전의 산하기관인 한전 KPS와 한전 KDN은 유력한 민영화 대상으로 꼽힌다. 대기업 등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영화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유통공사도 민영화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일부에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유통 부문인 AT센터와 화훼공판장 등을 먼저 분리, 민영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민영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도 타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통폐합 대상이며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도 두 기관 간의 통폐합 논의가 진행중이다.

특히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핵심인 한전의 경우, 세계 각국의 전력부문 민영화 실패 사례 등으로 민영화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대대적 구조조정으로 본사 인력의 10~15% 정도가 감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한국농촌공사도 본부 예산 및 인력 감축이 예고되고 있으며 우정사업정보센터도 당장 민영화 대상에는 포함되진 않았지만 공사화가 논의되는 등 구조조정 태풍에 직면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민영화 방안이 확정된다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입주할 공공기관 17개 가운데 적어도 2~3개, 많게는 4~5개 정도는 이전이 무산되고 일부 이전 공기업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에 따라 혁신도시 규모가 대폭 축소될 계획이어서 당초 이전 효과가 크게 반감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회 혁신도시 건설 촉진 국회의원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전 KPS, 한전 KDN 등이 민영화되더라도 본사는 당초 계획대로 공동혁신도시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민영화를 빌미로 공기업 본사의 이전을 백지화할 경우 전국적 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필사의 구조 중국 구조대원들이 13일 중국 서남부 쓰촨성 쥐위엔에서 강진으로 무너진 한 학교의 잔해 밑에서 깔린 소녀를 빼내고 있다. 중국 정부관계자는 쓰촨성 대지진으로 13일 현재까지 1만1천92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中 대지진 수만명 사망·실종

한국인 관광객 100여명 청두서 대피

지난 12일, 베이징 올림픽을 불과 3개월 앞두고 발생한 중국 쓰촨성 강진으로 최소 1만 2천 여명이 사망하는 등 수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 사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다 연락이 두절된 주민들도 수만 명이 보고되고 있어, 24만 명의 사망자를 냈던 '1976년 탕산(唐山) 대지진' 때와 비슷한 대재앙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6·23면〉

1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쓰촨성에서만 8천53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간쑤·윈난 등 3개 성과 충칭시에서도 수백 명이 사망했다. 또 지진의 진앙지인 원촨현 주민 6만여명도 연락두절로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쓰촨성 대지진으로 13일 현재까지 1만1천92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사고수습과정에서 사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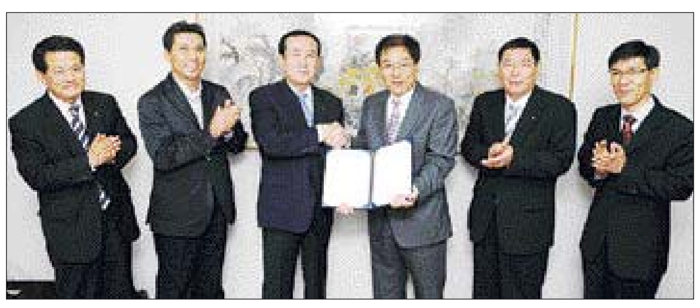
지진이 발생한 쓰촨성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100여 명이 항공기 운항중단으로 인해 현재 청두에 머물고 있지만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곳에 진출한 금호고속과 아시아나항공 지점 등 한국업체들도 일부 집기가 파손됐을 뿐 인명과 재산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쓰촨성 일대에는 한국 기업 53개가 진출해 있다.

우리 정부는 교민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중국의 요청을 받는 대로 구조요원 및 의료진을 파견하고 긴급 구호물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12일 오후 지진 발생 직후부터 청두 주재 총영사관과 베이징 주중대사관에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사고 발생 지역에 영사를 급파해 교민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진 발생 지역에는 1천여 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통신시설 등이 두절돼 상황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지 한인회나 유학생회 등을 통해 피해 여부를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고된 인명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진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지원대책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광주일보사 회의실에서 김진영 광주일보 대표이사와 배 웅 광주시 치과의사회 회장이 '광주·전남 구강건강 캠페인' 공동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동정 광주일보 경영전략본부장, 고정석 광주시 치과의사회 수석부회장, 김진영 광주일보 대표이사, 배 웅 광주시 치과의사회 회장, 신항락 광주일보 편집국장, 정병초 광주시 치과의사회 홍보이사.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일보·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 구강건강 캠페인' 협약

광주일보와 광주시 치과의사회가 '광주·전남 구강건강 캠페인'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진영 광주일보 대표이사와 배웅 광주시 치과의사회 회장은 13일 오전 광주일보사 회의실에서 '구강건강 캠페인 공동추진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광주일보와 치과의사회는 이 자리에서 ▲구강건강 캠페인 공동 추진 ▲구강 관련 공익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보도 ▲관련 행사 또는 이벤트 등의 분야에서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은 "이번 협약이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이라는 공익의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광주·전남지역 주민에게 올바른 구강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野 "재협상 먼저" 與 "쇠고기 별개"

한·미 FTA 비준 격돌

美 "한국 입장 수용"

정부·여당과 야권은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를 계기로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연계 여부를 놓고 격돌했다.

〈관련기사 3·4면〉

야권은 총체적 부실협상으로 드러난 쇠고기 개방문제의 전면 재협상 없이 FTA 비준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한 반면, 여권은 쇠고기 협상과 FTA 비준은 별개라며 17대 국회에서 FTA 비준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야권은 특히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의 오역파동을 문제삼아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연기하고 정운천 농림수산부 장관 등 책임자들의 경질을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당직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쇠고기 협상 장관 고시 유예 및 재협상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또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노당 등 야 3당은 14일 오전 각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 연석회의'를 가진 뒤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이 한미 FTA 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쇠고기 청문회'로 몰고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FTA를 저지하려는 민주당의 숨은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국익을 우선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12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한승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한국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미국은 한 총리의 성명을 수용하고 지지하며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제 21회 광주시미술대전 입상자·화보 ▶ 15면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법무법인 승지(勝旨) 설립인사
변호사 영입인사
법무법인 승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안심하고 드십시오!
닭고기·오리고기·계란을 먹어서는 절대로 AI에 걸리지 않습니다.